

공 개



의안번호	제 333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1. 23. (제 21 차)

의
결
사
항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11. 23.

1. 의결주문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다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은행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직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부과하고자 함

- 다 음 -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과태료 3억원 부과)

나.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 (1) 설명확인 의무 위반(과태료 5,400만원 부과)
- (2) 설명서교부 의무 위반(과태료 9,000만원 부과)
- (3) 녹취의무 위반(과태료 10억원 부과)

다.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1,080만원 부과)

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과태료 300만원 부과)

마. WM고객그룹대표 은행·증권 겸직시 사전승인 미이행(과태료 300만원 부과)

바.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개인 과태료 600만원 부과)

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아.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태료 1억1,000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2.7.21.) 심의필
-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2022.10.4.) 심의필
- 제21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11.17.) 심의필

<별지>

(주)국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5억 7,080만원 부과

- 조치사유 :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나.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 (1) 설명확인의무 위반
 - (2) 설명서교부의무 위반
 - (3) 녹취의무 위반다.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마. WM고객그룹대표 은행·증권 겸직시 사전승인 미이행
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의2, 제5항 제7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舊 「은행법 시행령」(17.10.19. 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전), <별표4>
舊 「신용정보법」(20.8.5.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이하 ‘舊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52조(과태료)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52조(과태료)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20.8.5.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이하 ‘舊 「신용정보법시행령」’이라 함)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

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舊¹ 「자본시장법」 부칙 제1조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제3항 제2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1항 제1호,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의2, 제109조(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제3항 제1의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9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지배구조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43조(과태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51조(과태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6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5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 임직원 에 대한 조치

- 부장 ○○○○ : 과태료 80만원
- 부장 ○○○○ : 과태료 120만원
- 본부장 ○○○○ : 과태료 부과 면제
- 前본부장 ○○○○ : 과태료 120만원
- 본부장 ○○○○ : 과태료 40만원
- 지점장 ○○○○ : 과태료 40만원
- 팀장 ○○○○ : 과태료 40만원
- 팀장 ○○○○ : 과태료 80만원
- 팀장 ○○○○ : 과태료 40만원
- 팀장 ○○○○ : 과태료 40만원

- 조치사유 : 바.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6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별표3>,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팀원 ◆◆◆은 “견책”, 팀장 ◆◆◆, 팀장 ◆◆◆, 팀장 ◆◆◆은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제7조(과태료)
舊 「특정금융정보법(2020.3.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舊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5조(감독·검사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신원확인)

- 팀장 , , 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36명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팀장 , 팀원 , , , , , , , ,
, , , , , , , , ,
총 17명에 대하여 “제재면제”로 조치
- 조치사유 : 아.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제5조의2(행정처분), 제7조(과태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 조치사유

【국민은행】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신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 등 ○개 부서는 20■■■.■■■.■. ~ 20□□□□□ 기간 중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 오픈뱅킹 서비스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공동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생산자(은행 등)가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 소비자(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 다른 은행 계좌 잔액, 다른 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통장 적요 인자내용 등, 이하 ‘오픈뱅킹 신용정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차례에 걸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총 ○○,○○○건을 전송*하면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예1) 다른 은행 계좌의 잔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을 광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1천만원 이상의 예금 가입시 모바일 쿠폰 및 현금을 제공하는 내용 등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예2) 다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중 통장 적요 인자내용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객을 광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금수령 계좌를 당행 계좌로 변경하도록 연금수령 계좌 변경시 경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광고성 정보 전송

< 타겟 마케팅 캠페인별 미동의 고객 수 >

(단위 : 명)

구분	부서	광고 실시일자	광고방식	광고대상 고객 선정시 이용한 오픈뱅킹 신용정보	오픈뱅킹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수
1	☆☆☆☆☆☆ (★★★★★★★)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2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3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4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5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6	☆☆☆☆☆☆ (★★★★★★★★★★★)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7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8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9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10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11	☆☆☆☆☆☆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12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13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14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15		20■■■■■■~□□□	전화	타행계좌 잔액	●●●●
16	☆☆☆☆☆☆	20■■■■■■~□□□□	전화	타행계좌 잔액	●,●●●●
17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18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19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20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21	☆☆☆☆☆☆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22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이체내역	●,●●●●
23		20■■■■■■~□□□□	전화,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24		20■■■■■■~□□□□	전화,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25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26	☆☆☆☆☆☆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27		20■■■■■■~□□□□	문자메시지	타행계좌 잔액	●,●●●●
합 계 (중복 제외시)					●●,●●●● (●●,●●●●)

나.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1) 설명확인의무 위반

-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 설명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총 ○건, ○.○○억원)

(2)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총 ○건, 약 ○.○○억원)

(3) 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등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녹취대상 상품인 ♡♡♡ 신탁 등을 ○○○건(판매금액 : 약 ○○억 ○,○○○만원 및 미화 ○○○만 ○,○○○달러) 판매하면서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았음*

* 녹취파일이 없는 경우 및 녹취파일에 잡음만 있는 경우 등 포함

다.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5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한 경우(투자권유준칙 변경시에도 동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20◆◆.◆.◆◆.*까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세차례 개정(20◇◇.◇.◇◇., 20■■■■.■■■■., 20◆◆.◆.◆◆.)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음

* 검사반이 20◇◇.◇.◇◇. 공시사항 점검시 (舊)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20■■■■.■■■■. 개정)이 공시되어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은행은 20□□.□.□□. 개정사항을 공시함

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에서는 20◆◆.◆.◆◆.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지 아니하고 ㉹㉹㉹㉹㉹㉹에 출연금 〇,〇〇〇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내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재산상 이익제공 건당 10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대상, 건당 10억원 초과시 이사회 사전 결의대상으로 본 건은 이사회 사전 결의대상은 아니지만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대상임

마. WM고객그룹대표 은행·증권 겸직시 사전승인 미이행

□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탁업 담당 임직원이 타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20◇◇.◇◇.◇◇.(시행일 20◆◆.◆◆.◆◆.) 조직개편으로 신탁업을 담당하게 된 WM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 겸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 20□□.□.□□. 조직개편을 재 실시하여 신탁부서를 다시 분리하고, 20□□.□.□. 금융위원회 겸직승인 사후 이행

바~아. 개인에 대한 조치사유로 차. 다음으로 이동

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타행송금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부(舊▲▲▲▲▲▲▲▲부)는 20◆◆.◆◆.◆◆. 스마트뱅킹시스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용 거래로그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면서, 동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오픈뱅킹 거래에 대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22:11)~20▽▽.▽▽.▽▽.(02:26) 기간 중 오픈뱅킹 타행 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계좌 이체 거래 총 ○○○건(○○○명), ○○○,○○○,○○○원이 이용자 계좌에서 출금된 후 동 출금계좌로 재입금되는 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① FDS로그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TransLogScribe.java)의 ‘응답코드’ 항목이 일부 NULL 값으로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해당 값을 일괄 “111”로 처리

- ② 동 프로그램이 금결원 오픈뱅킹 응답전문 중 동일한 식별자(‘응답코드’) 또한 변경 처리(“A0000” → “111”)
- ③ 금결원 오픈뱅킹 응답전문의 응답코드가 변경되어 이용자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이체한 오픈뱅킹 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인지하고 이용자 계좌에 재입금 처리 (오픈뱅킹에서는 이체거래가 취소되지 않아 수신자의 계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2) 전자금융거래(비대면 대출) 무결성 검증 방법 제공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3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 ▽▽▽▽부(舊▲▲▲▲▲▲▲▲부)는 20◆◆.◆.◆◆.~20□□.□.□. 기간 중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시스템 등의 전자금융 거래전문 의 이중처리(이하 ‘중복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검증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생성, 변경, 삭제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보장하는 방법

20◆◆.◆.◆◆.~20□□.□.□. 기간 중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대출거래 실행 시 총 ○○건(○○명), ○○○,○○○,○○○원의 중복이체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20□□.□.□. 중복이체 방어 로직을 비대면 가계대출 전체상품에 적용한 이후 추가 사고 미발생

※ (참고) 국민은행은 20□□.□□.□□. 이용자 문의를 통해 중복이체 발생 사실을 인지 하고 중복이체 방어로직을 ‘㉠㉠ ㉠㉠㉠㉠ ㉠㉠대출’ 상품에만 적용(20◆◆.◆.◆◆.) 하였으나, ‘㉠㉠㉠㉠㉠㉠ 신용’ 등 다른 비대면 대출 상품에는 방어로직을 적용 하지 않아 중복이체 거래가 재발

(3) 비대면시스템 통합 시 통제 절차 마련·준수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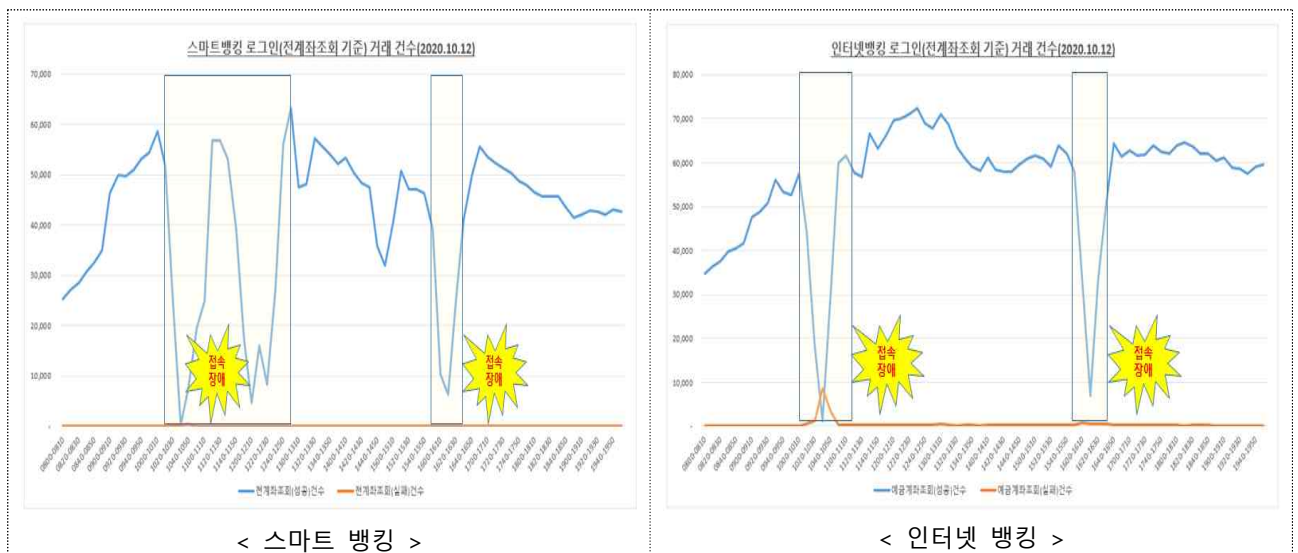
- 국민은행 ▽▽▽▽부(舊▲▲▲▲▲▲▲▲부)는 20◇◇.◇◇.◇◇. 비대면 시스템 통합 오픈 시 가용성 보장을 위해 주전산 및 재해복구센터에 구축한 세션관리(IMDG) 서버(총 ○○대)를 부하분산(Load-Balancing) 방식으로 구성하면서, 세션관리 서버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 특정 서버에서 발생한 장애(메모리 과부하 등 IT자원 잠식)가 전체 서버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통제절차 등(※국민은행은 사고일 이후 관련 통제 절차를 마련)

20◇◇.◇◇.◇◇. 10:35~13:12, 16:10~16:30 동안 특정 세션관리 서버의 장애가 전체 세션관리 서버로 전이되는 등 부하분산 장애가 발생하여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전월 동시간대 대비 접속성공률(최저 기준): 스마트뱅킹 0.4%, 인터넷뱅킹 2.3% 수준

<참고> 장애 발생일 비대면서비스 시간대별 접속 성공 건수 그래프



【 부장 ○○○ 등 10인 】

바.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 포함)을 신설·폐쇄한 경우, 자회사 등에 출자(출자현황 변경 포함)한 경우,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 ① 舊◆◆◆◆◆부 등은 20■■■.■■■.■■■~20□□.□□.□□. 기간 중 ■■■ ■■■ 신설 등 총 ○건의 신설·폐쇄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국외현지법인 등 신설·폐쇄 보고의무 위반 명세(총 5건)

순번	점포명	형태구분	개설일	폐쇄일	보고일	지연기간(일)
1	■■■	국외지점	정상보고	20■■■■■	20■■■■■	○○
2	■■■■■	국외현지법인	20■■■■■		20■■■■■	○○○
3	■■■■■	국외지점	20■■■■■		20■■■■■	○○○
4	■■■■■	국외지점	20■■■■■		20■■■■■	○○○
5	■■■■■	국외현지법인	20■■■■■		20■■■■■	○○

- ② 舊◆◆◆◆◆부 등은 20◇◇◇.◇◇◇.◇◇◇~20◆◆◆.◆◆◆.◆◆◆. 기간 중 ■■■■■ 지분투자 참여 등 총 ○건의 출자 및 출자현황 변경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자회사 등 출자 보고의무 위반 명세(총 6건)

순번	자회사명	지분율(전/후)	변경사유	변경일자	보고일	지연기간(일)
1	■■■■■	100%/100%	유상증자	20◇◇◇.◇◇◇.◇◇◇	20◆◆◆.◆◆◆.◆◆◆	○○○
2	■■■■■ ■■■■■	0%/100%	신규설립	20◇◇◇.◇◇◇.◇◇◇	20◆◆◆.◆◆◆.◆◆◆	○○○
3	■■■■■	0%/22%	유상증자	20◇◇◇.◇◇◇.◇◇◇	20◆◆◆.◆◆◆.◆◆◆	○,○○○
4	■■■■■ ■■■■■*	45%/45%	추가출자	20◇◇◇.◇◇◇.◇◇◇	20◆◆◆.◆◆◆.◆◆◆	○○○
5	■■■■■	22%/67%	유상증자	20◇◇◇.◇◇◇.◇◇◇	20◆◆◆.◆◆◆.◆◆◆	○○
6	■■■■■	0%/100%	신규설립	20◇◇◇.◇◇◇.◇◇◇	20◆◆◆.◆◆◆.◆◆◆	○○○

* 관련자 의견 수용 : 금융감독원 보고자료, 내부품의 등 절차를 완료하고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비정상종료되어 정상등록된 것으로 오인해 보고가 누락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 건의

③ ☆☆☆☆☆☆☆ 등 일부 영업점(★★★★부가 취합), ●●●●●부, ○○○○부는 20◆◆.◆.◆.~20□□.□.□□.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건에 대하여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음

다른 회사 지분증권 20% 초과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명세(총 16건)

순번	차주	대출금액	담보 주식	비율(%)	취급일	보고일	지연기간 (일)
1	<div><div>■ ■ ■ ■</div><div>■ ■ ■</div></div>	○ ○ 억 원	<div>■ ■ ■ ■ ■</div>	36.42	◆ ◆ ◆ ◆ ◆	<div>□ □ □ □</div>	○ ○ ○
2	<div><div>■ ■ ■ ■</div><div>■ ■ ■</div></div>	○ ○ 억 원	<div>■ ■ ■ ■ ■</div>	36.42	◆ ◆ ◆ ◆ ◆	<div>□ □ □ □</div>	○ ○ ○
3	<div><div>■ ■ ■ ■</div><div>■ ■ ■</div></div>	○ ○ 억 원	<div>■ ■ ■ ■ ■</div>	36.42	◆ ◆ ◆ ◆ ◆	<div>□ □ □ □</div>	○ ○ ○
4	<div><div>■ ■ ■ ■</div><div>■ ■ ■</div></div>	○ ○ ○ 억 원	<div>■ ■ ■ ■ ■</div>	36.42	◆ ◆ ◆ ◆ ◆	<div>□ □ □ □</div>	○ , ○ ○ ○
5	<div><div>■ ■ ■ ■</div><div>■ ■ ■</div></div>	○ ○ ○ 억 원	<div>■ ■ ■ ■ ■</div>	36.42	◆ ◆ ◆ ◆ ◆	<div>□ □ □ □</div>	○ ○ ○
6	<div><div>■ ■ ■ ■</div><div>■ ■ ■</div></div>	○ ○ ○ 억 원	<div>■ ■ ■ ■ ■</div>	36.42	◆ ◆ ◆ ◆ ◆	<div>□ □ □ □</div>	○ ○ ○
7	<div><div>■ ■ ■ ■</div><div>■ ■ ■</div></div>	○ ○ ○ 억 원	<div>■ ■ ■ ■ ■</div>	36.42	◆ ◆ ◆ ◆ ◆	<div>□ □ □ □</div>	○ ○ ○
8	<div>■ ■ ■ ■ ■ ■</div>	○ ○ 억 원	<div>■ ■ ■ ■ ■ ■</div>	27.56	◆ ◆ ◆ ◆ ◆	<div>□ □ □ □</div>	○ ○
9	<div>■ ■ ■ ■ ■ ■ ■</div>	○ ○ ○ 억 원	<div>■ ■ ■ ■ ■ ■ ■</div>	52.00	◆ ◆ ◆ ◆ ◆	<div>□ □ □ □</div>	○ , ○ ○ ○
10	<div>■ ■ ■ ■ ■ ■ ■</div>	○ ○ ○ . ○ ○ 억 원	<div>■ ■ ■ ■ ■ ■ ■</div>	37.50	◆ ◆ ◆ ◆ ◆	<div>□ □ □ □</div>	○ ○ ○
11	<div><div>■ ■ ■ ■ ■ ■</div><div>■ ■ ■ ■ ■ ■ ■ ■ ■ ■ ■ ■</div></div>	○ 천 ○ 백 만 달러	<div><div>■ ■ ■ ■ ■ ■</div><div>■ ■ ■ ■ ■ ■ ■ ■ ■ ■ ■ ■ ■ ■ ■ ■ ■</div></div>	100.0	◆ ◆ ◆ ◆ ◆	미 보고	
12	<div><div>■ ■ ■ ■ ■ ■ ■ ■ ■ ■ ■ ■</div><div>■ . ■ .</div></div>	○ 천 ○ 백 만 달러	<div><div>■ ■ ■ ■ ■ ■ ■ ■ ■ ■ ■ ■</div><div>■ . ■ .</div></div>	21.98	◆ ◆ ◆ ◆ ◆		
13	<div><div>■ ■ ■ ■ ■ ■ ■ ■ ■ ■ ■ ■</div><div>■ . ■ .</div></div>	○ ○ . ○ 백 만 달러	<div><div>■ ■ ■ ■ ■ ■ ■ ■ ■ ■ ■ ■</div><div>■ . ■ .</div></div>	21.98	◆ ◆ ◆ ◆ ◆		
14	<div><div>■ ■ ■ ■ ■ ■ ■</div><div>■ ■ ■ ■ ■ ■ ■ ■ ■ ■ ■ ■ ■ ■ ■ ■</div></div>	○ 억 ○ 천 만 달러	<div><div>■ ■ ■ ■ ■ ■ ■</div><div>■ ■ ■ ■ ■ ■ ■ ■ ■ ■ ■ ■ ■ ■ ■ ■</div></div>	25.00	◆ ◆ ◆ ◆ ◆		
15	<div><div>■ ■ ■ ■ ■ ■ ■</div><div>■ ■</div></div>						

【 팀장 ◆◆◆ 등 4인 】

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舊「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舊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대리인(거래요청자)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에서는 20◆◆.◆.◆. ◆◆◆의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자신이 신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에서는 20△△.△△.△△. ▲▲▲의 가족 대리인을 통한 원금 비보장형 ELS 신탁상품 가입시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20△△.△.△△. 발급)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센터에서는 20▼▼.▼.▼. ◁◁◁의 ELS 펀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계좌개설)

번호	고객명	개설일자	상품구분	거래금액	영업점명	행위자	감독자
(1)	◆◆◆	20◆◆.◆.◆.	개인형 IRP	0	□□□지점	◆◆◆	◆◆◆
(2)	▲▲▲	20△△△△△△	ELS(신탁)	○억원	■■■지점	◆◆◆	-
(3)	◁◁◁	20▼▼.▼.▼.	ELS(펀드)	○억원	▽▽▽▽센터	◆◆◆	-

※ (1)은 「금융실명법」 및 (舊)「특정금융정보법」 위반, (2), (3)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

【 팀장 ■■■ 등 36인 및 팀장 ○○○ 등 17인 】

아.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센터 등 ○○개 영업점(○○명)은 20◆◆.◆.◆.~20□□.□.□□.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내역 >

순번	행위자	해당 영업점	위반일시	위반건수	위반유형
1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2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3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4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5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6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7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20◆◆.◆.◆.~20□□.□.□□.	○	지연통보(○○일)
8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20◆◆.◆.◆.~20□□.□.□□.	○	지연통보(○○○일)
9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10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11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12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13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14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20◆◆.◆.◆.~20□□.□.□□.	○	지연통보(○일)
15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16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17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18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19	■■■	●●●지점	20◆◆.◆.◆.~20□□.□.□□.	○	지연통보(○○일)
20	■■■	●●●●●●●센터	20◆◆.◆.◆.~20□□.□.□□.	○	지연통보(○○일)

순번	행위자	해당 영업점	위반일시	위반건수	위반유형
21	☐☐☐☐	●●●●●●●센터	20◆◆◆◆◆◆◆	○	지연통보(○○일)
22	☐☐☐☐	●●●●●●●●●센터	20◆◆◆◆◆◆◆	○	지연통보(○○일)
23	☐☐☐☐	●●●지점	20◆◆◆◆◆◆◆	○	지연통보(○○일)
24	☐☐☐☐	●●●●지점	20◆◆◆◆◆◆◆	○	지연통보(○○일)
25	☐☐☐☐	●●●지점	20◆◆◆◆◆◆◆	○	지연통보(○○일)
26	☐☐☐☐	●●●●●●●●●센터	20◆◆◆◆◆◆◆	○	지연통보(○○○일)
27	☐☐☐☐	●●●지점	20◆◆◆◆◆◆◆	○	지연통보(○○○일)

(2)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센터 등 ○○개 영업점(○○명)은 20◆◆◆◆◆~20☐☐☐☐☐ 기간 중 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건의 통보유예 기간을 잘못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음

* ① 계산 착오 등으로 연도·월 등을 착오입력 ② 통보유예일자가 아닌 통보유예 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의 말일자를 일괄 입력 ③ 통보유예 요청기한 상한 (최대 6개월)을 초과 입력 등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내역 >

순번	행위자	해당 영업점	실제통보 유예기한	기록관리된 통보유예기한	위반건수
1	☐☐☐☐	●●●●●센터	20◆◆◆◆◆◆◆	20☐☐.☐☐.☐☐	○
			20◆◆◆◆◆◆◆	20☐☐.☐☐.☐☐	○
			20◆◆◆◆◆◆◆	20☐☐.☐☐.☐☐	○
			20◆◆◆◆◆◆◆	20☐☐.☐☐.☐☐	○
2	☐☐☐☐	●●●●●센터	20◆◆◆◆◆◆◆	20☐☐.☐☐.☐☐	○
			20◆◆◆◆◆◆◆	20☐☐.☐☐.☐☐	○
			20◆◆◆◆◆◆◆	20☐☐.☐☐.☐☐	○
			20◆◆◆◆◆◆◆	20☐☐.☐☐.☐☐	○
3	☐☐☐☐	●●●●●센터	20◆◆◆◆◆◆◆	20☐☐.☐☐.☐☐	○
			20◆◆◆◆◆◆◆	20☐☐.☐☐.☐☐	○
			20◆◆◆◆◆◆◆	20☐☐.☐☐.☐☐	○
			20◆◆◆◆◆◆◆	20☐☐.☐☐.☐☐	○

[illegible]

순번	행위자	해당 영업점	실제통보 유예기한	기록관리된 통보유예기한	위반건수
31	●●●●*	●●●●센터	20◆◆.◆◆.◆◆	20□□.□□.□□	○
32	□□□□	●●●●센터	20◆◆.◆◆.◆◆	20□□.□□.□□	○
			20◆◆.◆◆.◆◆	20□□.□□.□□	○
			20◆◆.◆◆.◆◆	20□□.□□.□□	○
			20◆◆.◆◆.◆◆	20□□.□□.□□	○
			20◆◆.◆◆.◆◆	20□□.□□.□□	○
33	□□□□	●●●●센터	20◆◆.◆◆.◆◆	20□□.□□.□□	○
			20◆◆.◆◆.◆◆	20□□.□□.□□	○
34	□□□□	●●●●센터	20◆◆.◆◆.◆◆	20□□.□□.□□	○
			20◆◆.◆◆.◆◆	20□□.□□.□□	○
35	●●●●*	●●●●센터	20◆◆.◆◆.◆◆	20□□.□□.□□	○
36	●●●●*	●●●●센터	20◆◆.◆◆.◆◆	20□□.□□.□□	○
37	●●●*	●●●●센터	20◆◆.◆◆.◆◆	20□□.□□.□□	○
38	●●●●*	●●●●센터	20◆◆.◆◆.◆◆	20□□.□□.□□	○
39	●●●●*	●●●●지점	20◆◆.◆◆.◆◆	20□□.□□.□□	○
40	●●●●*	●●●지점	20◆◆.◆◆.◆◆	20□□.□□.□□	○
41	●●●●*	●●●지점	20◆◆.◆◆.◆◆	20□□.□□.□□	○
42	●●●●*	●●●지점	20◆◆.◆◆.◆◆	20□□.□□.□□	○
43	●●●●*	●●●지점	20◆◆.◆◆.◆◆	20□□.□□.□□	○
44	●●●●*	●●●지점	20◆◆.◆◆.◆◆	20□□.□□.□□	○
45	●●●●*	●●●●지점	20◆◆.◆◆.◆◆	20□□.□□.□□	○
46	●●●●*	●●●●●●●●센터	20◆◆.◆◆.◆◆	20□□.□□.□□	○
47	●●●●*	●●●●지점	20◆◆.◆◆.◆◆	20□□.□□.□□	○
48	●●●●*	●●●지점	20◆◆.◆◆.◆◆	20□□.□□.□□	○
49	●●●●*	●●●●지점	20◆◆.◆◆.◆◆	20□□.□□.□□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지연통보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건) 기록관리 위반에 대하여 제재면제 건의(○○명)

** ‘●●●●’는 정보제공일을 오기재(실제 정보제공일 20◆◆.◆◆.◆◆, 기록관리된 정보제공일 20□□.□□.□□)

<붙임>

관계 법규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 1.~2. (생략)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3. (생략)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 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폐쇄한 때
- 5.~6. (생략)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7. 4. 18.>

- 1.~5. (생략)
-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 5의3.~7의5. (생략)
- 8.~11. (생략)
- ②~④ (생략)
-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18. 12. 11., 2020. 5. 19.>
 - 1.~6. (생략)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생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5. 19.>

[전문개정 2010. 5. 17.]

□ (舊) 「은행법」 (2020.8.20. 법률17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생략)

⑤ (생략)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9.>

1.~2. (생략)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제1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5. (생략)

[본조신설 2016. 6. 28.]

[중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4. (생략)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생략)

[본조신설 2010. 11. 15.]

[중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0. 11. 15.>]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0. 8. 19.>

[본조신설 2014. 2. 11.]

[별표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37.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3,000
서.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5호	2,000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7호	200

□ (舊) 「은행법 시행령」 (‘17.10.19. 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전)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7호	100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8.5.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1.~6. (생략)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7. 11. 28.>

1. (생략)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8.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1.~14. (생략)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③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⑥ (삭제)

[전문개정 2015. 3. 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②~ ⑧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7. 11. 28., 2020. 2. 4.>

1~2. (생략)

2의2. (생략)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2. 4.>

1~14. (생략)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18. (생략)

④~⑦ (생략)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8.5.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본조신설 2015. 9. 11.]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쿠. 법 제40조제7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2,4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8. 4.>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바.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5호	2,40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설명 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3., 2010. 3. 12.,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19. 11. 26.>

1.~20. (생략)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49. (생략)

②~⑥ (생략)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5.19. 법률 제171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

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략)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6.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8. (생략)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3., 2010. 3. 12.,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2021. 4. 20.>

1.~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49.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2015. 7. 24., 2016. 3. 22.,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21. 4. 20.>

1. (생략)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19. (생략)

④~⑥ (생략)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4. 8. 12.>

1. 파생결합증권. 다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생략)
5. 파생상품이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③ (생략)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2018. 9. 28.>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자문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투자자문업자가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와 범위
 - 다. 투자자문 제공 절차와 투자자문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규모 및 산정방식
 - 라. 그 밖에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	법 제449조	5,000

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 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29호	
--	---------	--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5.10.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6. 11., 2017. 5. 8., 2017. 10. 17., 2019. 1. 15., 2019. 8. 20., 2021. 2. 9.>

1.~2. (생략)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3.~14. (생략)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7. 10. 17.>

1. (생략)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3.~10.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2호	1,800

□ 舊 「금융투자업규정」 (‘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 전)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16.6.28.>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 (생략)

10.~14. (생략)

② (생략)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1.~28. (생략)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신설 2013.12.4.>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30.~32.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2. (생략)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10. (생략)

③~④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다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과태료금액
바. 법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2	3,00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⑤ (생략)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

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04. 7. 29., 2005. 8. 17., 2008. 2. 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5.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 6. 20.>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 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5.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1. 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8. 2. 29., 2014. 11. 28.>

③~⑤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나.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0만원
다.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만원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만원
마.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	법 제8조	1,000만원

<참고>

☐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II. 금융거래 형태별 실명거래 방법

3. 대리인에 의한 거래

-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 :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하여야 함

Ⅲ. 금융거래자별 실명거래 방법

2. 법인 및 임의단체

가. 법인

- 명의인이 법인이고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함

□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Ⅱ. 유형별 대면 실명거래 방법

1. 계좌에 의한 거래

<원칙>

- 가족대리시 징구하는 가족관계확인서류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舊)「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 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

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舊)「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적용범위 등)

- ②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한다.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략>

제10조의6(고객확인 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 ③ <생략>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2. 개별기준

위 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800만원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신원확인) ①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략>
3. 실명번호
4. <생략>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 <생략>

③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 ② (생략)

③ (생략)

3. ~ 1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5,000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함

1. ~ 4. (생략)
5. 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할 것
6. ~ 10. (생략)

제29조(프로그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7. ~ 10. (생략)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7) (삭제)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2. 27.>

1. 면직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감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신설 2005. 8. 26., 2020. 5. 13.>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7., 2005. 8. 26., 2006. 8. 31.,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1. 삭제 <2014. 10. 31.>

2. 삭제 <2014. 10. 31.>

3. 삭제 <2014. 10. 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7.,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1. 삭제 <2016. 3. 15.>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08. 9. 1., 2008. 12.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거부·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개정 2010. 1. 5., 2014. 7. 23.>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개정 2010. 1. 5., 2015. 6. 24.>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개정 2010. 1. 5.>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개정 2010. 1. 5., 2014. 7. 23.>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개정 2010. 1. 5., 2020. 5. 13.>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개정 2010. 1. 5.>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신설 2020. 5. 13.>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신설 2020. 5. 13.>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5., 2010. 8. 31. 2014. 7. 23.>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10. 1. 5.>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2016. 3. 15.>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개정 2001.8.17, 2004.2.27., 2008.12.31, 2010.1.5., 2014.7.23., 2016.2.29.>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행위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고의	건축~감봉1월	건축 이하	주의
과실	주의	주의	주의

<별표6> <신설 2017.10.19., 2020. 5. 13.>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제449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준용규정 포함)

- (1) 위반건수 : 확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계약 건수
-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한 계약 건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1) 중 대 :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경 미 : 판매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적용

I - 4. IT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설 2011.12.28., 개정 2014.7.23., 2016.2.29., 2020. 5. 13.>

1. 제재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한 행위

<p>가. IT사고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1 :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의로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유형 2 : (접근매체 위변조 등에 의한 금전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접근매
--

체의 위조, 변조 및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전송
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사고(단, 금융회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함)

- 유형 3 :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지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 재해복구목표시간을 초과하여 중단된 경우
- 유형 4 :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제4절 위반) 해킹
등으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나. IT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유형 5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IT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다. 기타

- 유형 6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1호 및 제4항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삭제·훼손한 경우

2. 제재기준

구 분	사고금액 위반건수 초과(중단)시간	제재양정	
		임직원	기관
유형 1	-	해임권고(면직)	기관경고 이상
유형 2	50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10억원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3	24시간 이상	직무정지(정직)이상	기관경고 이상
	5시간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시간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4	1백만건 이상이고 전체고객수의 10%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10만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기관주의
	1만건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5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유형 6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기관주의 이상

주1) 'IT사고'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말함

주2) '핵심업무'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별표1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말함

주3) 동일한 위반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 가능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바.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제4항제6호
29. 금융실명제 관련사항 차.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부과금액 5천만원 이하에 한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금융정책과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일반은행검사국 IT검사국
연락처	02-2100-2982 02-2100-2833 02-2100-2663 02-2100-2974 02-2100-2697	02-3145-7062 02-3145-7429